ETRI

2012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 융합기술 특집

유럽의 ICT 관련 부처 및 정책 동향

European ICT-related Organization and Policy Trends

조경섭 (K.S. Cho) 클라우드융합네트워킹연구팀 책임연구원
이현우 (H.W. Lee) 클라우드융합네트워킹연구팀 팀장
류 원 (W. Ryu) 스마트스크린융합연구부 부장
박준국 (J.K. Park)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과장
정석균 (S.K. Chung)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Ⅰ. 서론
Ⅱ. 독일 ICT 관련 부처 및 정책 동향
Ⅲ. 프랑스 ICT 관련 부처 및 정책 동향
Ⅳ. 결론

서비스 플랫폼의 대두로 촉발된 스마트 융합은 점차 스마트 붐으로 진행되고 있고, 유럽 주요국들은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써 스마트 융합의 산업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방송통신융합 기술 정책의 관련 부처와 융합기술 정책의 진행 상황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 20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Ⅰ. 서론

서비스 플랫폼의 대두로 촉발된 스마트 융합은 점차 스마트 붐으로 진행되고 있고, 유럽 주요국들은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써 스마트 융합의 산업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양대 서비스 플랫폼인 애플과 구글 모두 미국 기업으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럽 내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는 현재까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유럽 내에서는 서비스 플랫폼 사업 간의 직접적 경쟁보다는 서비스 플랫폼에 기반을 둔 스마트 융합의 산업화 및 후생 증진 방향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들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독일과 프랑스를 대상으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관련 부처와 이들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독일 ICT 관련 부처 및 정책 동향, Ⅲ장에서는 프랑스 ICT 관련 부처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Ⅳ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독일 ICT 관련 부처 및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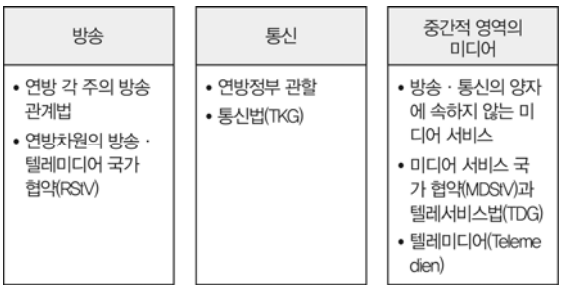
1. 방송통신 분야 정부 조직

독일의 방송 부문의 경우 연방정부의 관할에서 가급적 거리를 두어 전통적인 지방자치제 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 방송 정책의 경우 연방정권과 분리하여 각 주정부 관할로 분산시키는 정책 방향의 배경을 갖게 된다. 하지만 통신 산업은 대규모 기간투자이며 기술 주기가 매우 빠르므로, 투자규모와 제품수명주기론적 기본 전제하에 독일 전체적 표준규정을 따르는 것이 투자의 비효율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된다. 더욱이 각 주는 연방정부의 통신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되고 독일의 연방정부는 EU 차원의 통신 정책과 공조를 취해야 하는 상황으로 통신 분야의 경우 독일 연방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형식으로 정책적 공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방송 정책의 경우 연방정권과 분리하여 각 주정부 관할로 분산시켜 둔 것이 특징이고, 이것이 바로 독일의 독특한 형태의 방송통신법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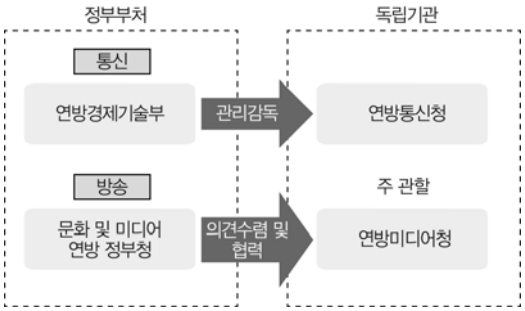
독일은 연방국가의 특성과 정치적 배경에 따른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 방송의 운용 및 규제에 관한 입법은 주정부에 맡기고, 통신은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 두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일차적인 대처는 연방과 주 사이의 권한 설정을 위한 서비스 개념의 분류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방송통신 영역의 경우 방송정책권을 연방 각 주에서 권리행사하고 있고, 통신에 대한 정책권은 연방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독일의 방송통신 규제의 기본 축은 (그림 1)과 같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구별을 전제로 하면서도,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고, 미디어 간의 매체적 특성이 사라져 가는 미래의 멀티미디어 사회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방송 · 텔레미디어 국가 협약(RStV)'과 '텔레미디어법(TDG)'을 체결 · 제정하여 통신과 방송의 양자에 속하지 않는 미디어법(TMG) 제정을 통해 중간적 영역의 서비스까지 연방의 관할로 하는 새로운 법제를 탄생시켰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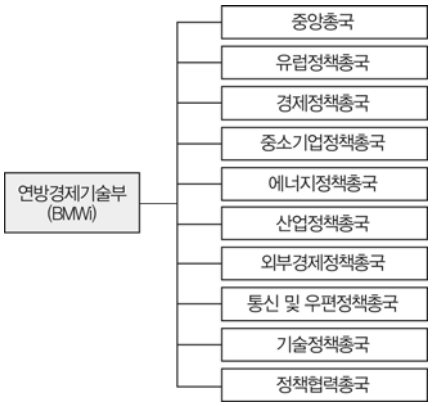
독일에서의 방송 콘텐츠의 권한은 각각의 주에 귀속되어 있고, 기술적인 인프라 측면은 연방정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 내용과 방송 기술을 구분하



(그림 1) 독일의 방송통신 규제의 기본 축



(그림 2) 방송통신 관련 업무 구조



(그림 3) 연방경제기술부 조직도

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 관련 신기술이 대두될 때 방송 콘텐츠적 요소인가 혹은 방송 인프라적 요소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되고 이는 연방정부와 각 주의 권한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구조이다.

이러한 법률체계를 기반으로 독일 방송통신법의 스마트 융합을 관장하는 주요 부서는 경제 및 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경제기술부(BMWi), 정보통신 영역을 담당하는 독립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청(Bundesnetzagentur), 문화예술 및 미디어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 및 미디어 연방정부청(BKM), 마지막으로 주 관할의 미디어 규제 감독기관인 연방미디어청(die medienanstalte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부부처의 독립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의견수렴 및 협력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들의 연계관계는 (그림 2)와 같다[1].

가. 연방경제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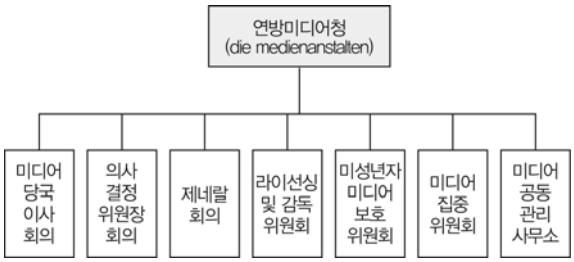
연방경제기술부는 (그림 3)과 같이 1개의 중앙총국과 9개의 정책총국이 운영되고 있으며[2], 이들은 신기술과 지식 기반 산업 및 서비스에 특화된 신규 기업을 지원하며, 핵심 산업 기술(에너지, 교통, 항공 및 조선) 및 핵심 융합 산업(정보통신 기술과 멀티미디어) 촉진으로 각 영역에서 독일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R&D를 강화하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산업 전반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한다.

연방경제기술부는 독일의 경제 번영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자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한 최우선 과제로서 경제 정책의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독일 경제 부흥을 선도한다. 기술 및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 미국의 서비스 플랫폼 확산에 따라 주도적 위치가 아니라 규제 중심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 연방미디어청

독일의 헌법에 따라 방송은 공공 서비스 방송 또는 상업적 서비스 방송으로 분류되는데, 각각의 주가 이들을 감독하는 형태이다. 결과적으로 상업 방송은 국가의 미디어 법안에 기초하고 각각의 상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은 각 주 당국이 설정한 조항을 준수하면서,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콘텐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며 사업을 운영 중이다. 연방미디어청은 14개 주 미디어청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전국적인 문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연방미디어청은 독일의 이원화된 방송 체제를 원활화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원칙에 의거해 상업 TV 및 라디오 방송을 준수할 책임을 보유하고 있다. 연방 미디어청에는 총 7개의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조직도는 (그림 4)와 같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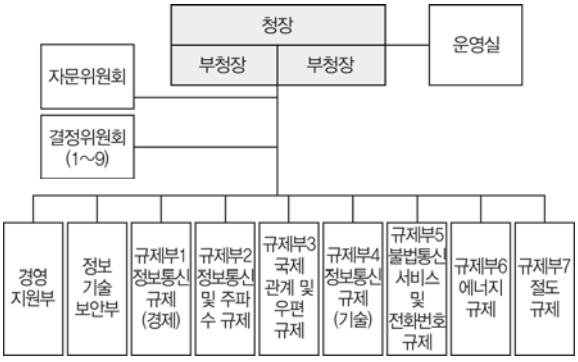


(그림 4) 연방미디어청 위원회 조직도

다. 연방통신청

연방통신청은 정보통신 분야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1998년 1월 독일의 정보통신 영역에 있어 자유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 입안을 하며, 규제 감독의 분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통신법에 근거한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통신청은 통신에 관련한 방대한 업무와 규제 감독을 하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하는데, 이 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청장과 2인의 부청장 아래 9개의 결정위원회, 1개의 자문위원회 및 7개의 규제 부서가 업무를 진행한다. 결정위원회는 준사법적 조직으로 담당 분야에 따라 9개가 존재하며 면허, 주파수 배분, 요금 규제, 반경쟁 행위 등에 대한 규제 내용을 결정하며, '결정위원회 1'은 청장 결정위원회로 청장 및 부청장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한다((그림 5) 참조)[4]. 연방통신청 조직 대부분이 ICT 분야와 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데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연방통신청 조직도

라. 문화 및 미디어 연방정부청

문화 및 미디어 연방정부청(BKM)은 독일의 문화 및 미디어 영역에서의 발전을 꾀하고자 연방정부 내각으로 설립되어 핵심 업무를 추진한다. 총 200여 명의 직원들이 베를린과 본에서 근무하고 있고, 문화 및 미디어 연방정부청은 스마트 융합 부문에 있어 콘텐츠 파이프 라인의 형성 부분을 담당한다. 즉, 문화 및 미디어 연방정부청은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성 및 콘텐츠 확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독립적인 행정부서는 아니지만 연방 수상의 직속 기구로서 연방정부청장은 문화 미디어 영역에 대해 전반적인 조언과 제도 설계에 따른 행정 서포터 역할을 한다.

문화 및 미디어 연방정부청은 독일 내에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기구를 후원하고 예술과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진흥 정책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독일의 위상을 드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2. 방송통신융합 기술 정책

가. 인프라 관련 기술 정책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는 2007년 IT의 10년 후를 미리 전망하면서 경제적 의미의 응용잠재력이 큰 핵심 5개 업종과 영역에 대해 중점을 둔 'IKT 2020-혁신을 위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온 'IT Research 2006'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첨단기술전략의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IKT 2020에서는 경제적 잠재력이 큰 미래 IT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성과의 신속한 상용화를 촉진하는 중점 지원 분야 및 업종을 선정하였는데 주요 분야는 정보보호 기술,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시스템, 자동차, 의료기기, 물류산업, 에너지 등이다. 주요 예산계획으로는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프로젝트 지원과 연구기관 지원으

〈표 1〉 IKT 2020 프로그램의 ICT 프로젝트 지원 계획

(단위: 백만 유로)

재원	분야	'07	'08	'09	'10	'11	합계
BMBF (연방교육연구부)	네트워크, 나노전자, 소프트웨어 시스템, 마이크로 시스템	287	292	293	299.3	308.3	1,479.6
BMWi (연방경제기술부)	멀티미디어, ICT 어플	60.8	71.2	87	87.5	73	379.5

로 약 32억 유로를, 연방경제기술부는 프로젝트 지원으로 약 3.8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IKT 2020 프로그램을 통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한 연구기관의 예산액은 〈표 1〉과 같다[5].

독일의 브로드밴드 개발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독일의 스마트 융합은 ICT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그린 에너지와 제조업체의 친환경 기술의 기초 인프라로서 효율성 증대의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09년도 독일 연방정부는 최소 50Mb 이상의 고속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당위성을 근거로 브로드밴드 개발에 있어 추가적인 촉진을 시도하였다. 즉, 2009년 2월 독일 정부는 제2차 경기부양정책의 하나로서 브로드밴드 전략을 설정하고 전국 브로드밴드 망 정비에 착수하였다. 2010년부터 시작된 브로드밴드 전략은 총 3단계로 나누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2018년까지 독일 전 세대에 60Mbps의 브로드밴드 망 접속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표 2〉 참조)[6].

나. 융합 관련 기술 정책

2008년 11월 연방경제기술부는 독일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선언문인 'The third national IT summit: shaping the digital future in Germany'를 발표하였다. 이는 정보통신을 활용해 독일의 산업을 부흥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설정한 전략이었다. 총 6가지의 핵심 전략을 나열하여 독일의 정보통신 영역의 발전을 꾀하였는데, 인터넷 전략 강화,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전자정부 및 헬스케어 시스템의 개발 및 지원, 그린 IT, 인터넷 보안의 강화, ICT 전문가 양성 등이다.

〈표 2〉 브로드밴드 전략 세부 사항

단계	설정 연도	목표
1단계	2010년	2010년까지 독일 내 브로드밴드 접속 범위를 확대하여 불통 지역 해소
2단계	2014년	2014년까지 독일 내 브로드밴드 접속 범위를 전 세대의 75%에 속도 60Mbps 이상의 브로드밴드 망 접속 실현
3단계	2018년	2018년까지 독일 내 모든 시민들에게 60Mbps 이상의 속도로 100% 커버리지 달성

2008년 11월 20일 연방경제기술부는 'Germany: Green IT Pioneer'를 시행하였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성장전략을 추구하며, 방법론적으로 환경친화적 에너지/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ICT와 융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방경제기술부 주도로 'Green IT Alliance'를 구성하였다.

2000년대 독일은 ICT를 통해 성장과 고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데, 전통적인 분야인 정보통신, 교통, 보건, 레저, 관광, 행정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스마트 네트워킹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독일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단기 ICT 융합 정책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Digital Germany 2015'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ICT를 이용한 신성장 동력 활용 및 고용 창출, 독일 연방의 디지털 네트워크 구성, 디지털 보안 강화, ICT 산업을 위한 R&D, ICT 교육 및 통합, 디지털 사회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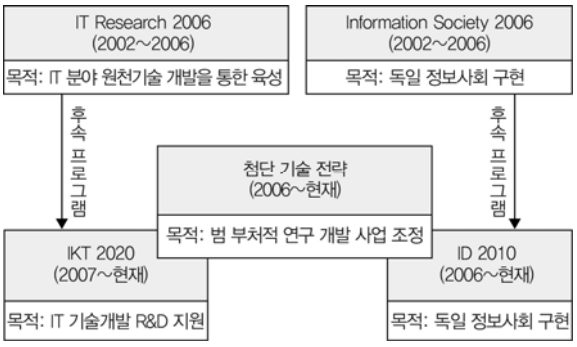
독일 정부는 기존 첨단기술전략에서 발전시켜 향후 10년간 독일의 미래 발전 연구계획을 설정한 'High-Tech Strategy 2020 for Germany'를 설정하였다. 이는 EU 재정위기를 타개하고자 경제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계획으로 도입된 것인데, 기후변화, 식량 문

제, 한정된 에너지원 등의 문제들에 대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중점 관심 사항이다. 기존 첨단기술전략의 17대 중점기술 개발 분야를 총 5개의 기술 개발 분야로 압축하여 보다 심도 있는 지원과 정책 개발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5가지의 핵심 영역은 기후변화/에너지, 보건/영양, 이동성, 보안, 정보통신이다.

3. 정보통신 기술 정책

독일의 ICT 분야의 진화는 2000년대 이후에 급격히 일어나게 되는데, 2000년대 이후 'Information Society 2006 계획' 및 'IT Research 2006 프로그램'을 양대 축으로 한 독일의 IT 정책은 첨단기술전략으로 통합되어 추진되어 왔다. 현재 'Informationgesellschaft Deutschland 2010'과 'IKT 2020' 프로그램은 IT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6) 참조)[7].

연방정부는 다양한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모든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 성공적인 연구 성과는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성과가 산업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개선되었다. 이는 연구 성과 결과물의 활용권한을 전적으로 프로젝트 기관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이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도 향유할 수 있게 하게 되어 보다 많은 이용 기회와 높은 이윤 창출 효과가 있게 되었다. 또한 대학과 연구기관 성과물의 기술이전도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고용창출 기회도 확장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그림 6) 독일의 IT 관련 정책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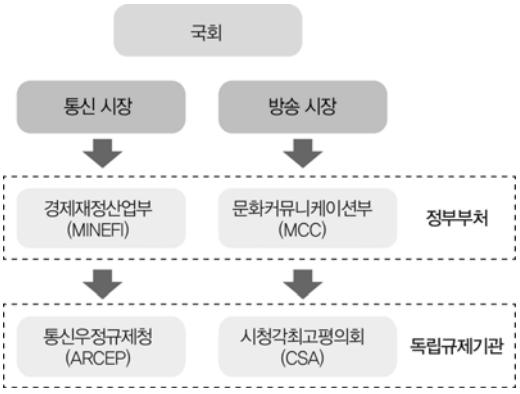
Ⅲ. 프랑스 ICT 관련 부처 및 정책 동향

1. 방송통신 분야 정부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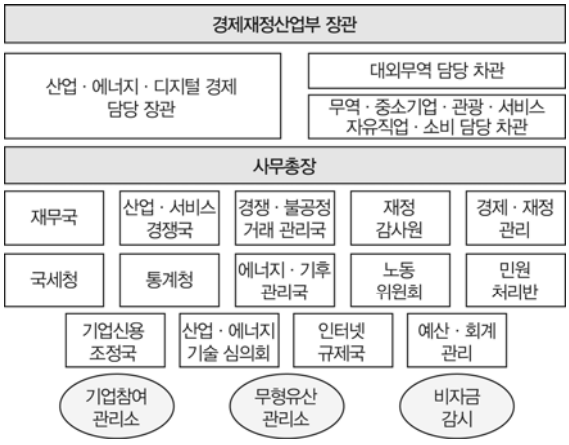
프랑스의 방송통신 기관은 산업 정책을 총괄하고 정보통신 관련 입법을 제안하는 경제재무산업부(MINEFI), 방송 및 미디어 전반에 대한 입법을 제안하고 시행 및 규제를 제정하는 문화커뮤니케이션부(MCC), 전자 통신망과 통신 서비스 부문을 규제하는 통신우정규제청(ARCEP), 그리고 방송 부문을 규제하는 시청각최고평의회(CSA)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방송통신 정책 조직 구조는 (그림 7)과 같다.

가. 경제재무산업부

경제재무산업부는 정보통신 및 재정 부문을 포함한 프랑스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와 기능적으로 유사하다. 경제재정산업부의 역할은 첫째, 세금정책국과 예산부에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세법을 입안하고 둘째, 프랑스 예산, 경제, 재정 시스템을 감독하며, 셋째, 관광, 중소기업, 공정 경쟁,



(그림 7) 프랑스 방송통신 정책 조직 구조



(그림 8) 경제재무산업부의 조직 구조

소비자 보호, 통신 서비스 등과 같은 산업을 감독하고 정책을 총괄하며 마지막으로 고용 정책과 교육을 감독하고 디지털 경제 전략을 추진한다. 2009년도 개편된 경제재무산업부의 조직체계는 (그림 8)과 같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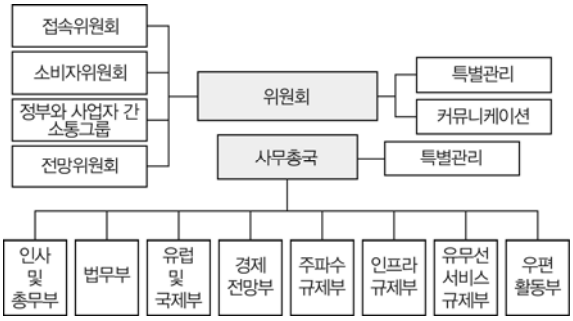
나. 통신우정규제청

통신우정규제청은 케이블망을 포함하는 전자통신망과 통신 서비스 전반에 걸친 경제적 규제를 책임지고, 현장조사와 금지 명령 등의 제재 권한 및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전자통신망과 서비스에 관련된 경제적 규제까지를 담당한다.

통신우정규제청은 청장을 포함한 7명의 전문가가 법률, 기술, 경제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3명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2명은 상원 의장이 임명하고, 나머지 2명은 하원의장이 선발한다. 조직 구조는 (그림 9)와 같다[9].

다. 시청각최고평의회

시청각최고평의회는 시청각 부문(방송 분야) 담당 독립 규제기관이다. 시청각최고평의회의 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통령 및 상 · 하원이 지명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직책의 겸임은 불가하다((그림 10) 참조)[10].



(그림 9) 통신우정규제청 조직도

시청각최고평의회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 및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TV와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보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의 평등 원칙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공공 부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왔다. 또한 주파수 할당을 포함한 전파의 관리 및 규제,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TV로의 이행 계획 및 HDTV 방송과 휴대전화 수신용 방송의 채널 선정을 담당한다. 특히 방송과 통신에 있어서 자유로운 경쟁을 감시하고, 프랑스 내 TV프로그램의 제작과 생산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 및 프랑스 언어와 문화를 보호 감독, 프로그램의 질의 개선과 서비스 공급자와 분배자에 대한 의무규정 또는 협약 내용의 준수 여부를 감시 및 권고하는 즉,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그림 10) 시청각최고평의회 조직도

라. 문화커뮤니케이션부

문화커뮤니케이션부는 1959년 설립된 문화부에서 발전한 조직으로서 방송을 포함한 영상 · 음성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정책 입안 및 규제 · 기준을 제정한다. 또한 방송기관에 대한 업무운영규제의 제정 및 일부 경영위원의 임명, 공공방송 부문의 연차 예산책정 등을 담당한다.

문화커뮤니케이션부는 2010년 1월 13일 향상된 문화 정책을 마련하고 전략적인 관리 행정을 위해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던 국을 사무총국, 문화유산국, 예술진흥국, 그리고 미디어 및 산업문화국의 4개 국 체재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스마트 융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가 미디어 및 산업문화국으로 해당국은 미디어, 광고 온라인 콘텐츠 출판 정책을 평가 및 입안하는 업무를 한다((그림 11) 참조)[11].

2. 방송통신융합 기술 정책

가. 방송/미디어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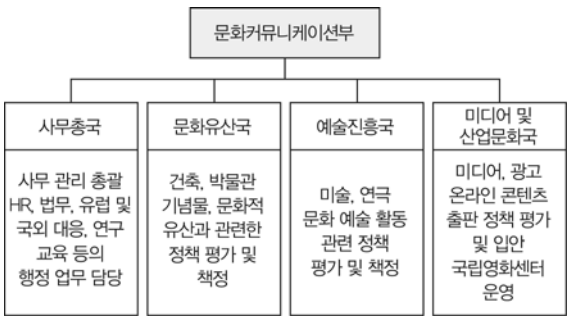
사르코지 정부는 디지털 경제 즉, 통신, 방송, 소프트웨어, 정보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등이 경제의 인프라로 작용하는 경제 구조의 기틀을 형성하고자 하였고, 2008년 5월 집권여당 다니엘 지아지(anièle Giazzi) 위원의 보고서 '미디어와 디지털(les médias et le numérique)'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해당 보고서는 신문/잡지의 다원성 강화, 양질의 뉴스 지원, 콘텐츠의 유통채널 촉진, 미디어 미래전략 수립, 미디어 산업 투자,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 문화사업의 현대화, 미디어의 디지털화의 8가지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지아지 보고서의 주요 정책 목표는 뉴스 및 미디어 매체의 디지털화를 통한 규모의 확장과 콘텐츠 부분에 대한 투자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향후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의 일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목표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12월 22일 시청각최고평의회의 승인을 거쳐 2009년 2월 4일 1차 디지털 전환 시범도시인 쿨로미에(Coulommier)시의 디지털 전환 완료 이후 현재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완료된 상태이다. 프랑스는 2011년 11월 30일부터 디지털 TV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한국에 비해 1년 정도 빠른 것이다. (그림 12)에서는 프랑스의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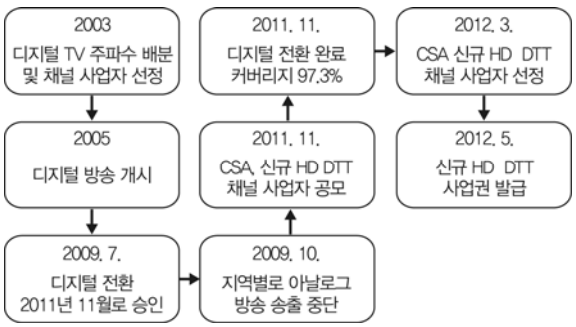
프랑스 정부는 2008년 10월 디지털화 계획을 담은 'Digital France 2012'를 발표하였으며, 그 4대 전략적 목표는 첫째는 전 국민의 브로드밴드 접속 보장, 둘째는 디지털 콘텐츠 접속 보장, 셋째는 디지털 서비스 다각화, 넷째는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한 추진 목적으로 국민총생산의 정보통신(ICT) 비중을 2008년 6%에서 2012년 12%로 증대하였다.

나. 통신/ICT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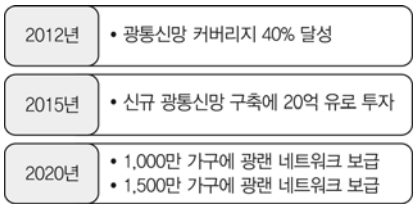
프랑스 정부는 2006년 프랑스 전역에 초고속 브로드



(그림 11) 문화커뮤니케이션부의 조직도



(그림 12) 프랑스의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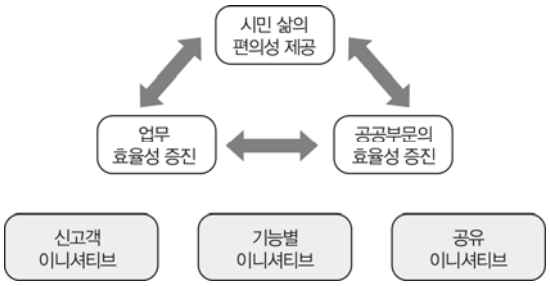
(그림 13) France Telecom의 Conquests 2015 계획

밴드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FTTx (Fiber to the x)가 국가 정보통신 기반으로 장래성이 가장 높고, 향후 스마트 융합의 기초 인프라로서 투자가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에 대한 실행방안으로써 '초고속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 관련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2007년부터는 지방자치제와 대기업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협력에 의한 FTTx 기반 구축 프로젝트의 활성화가 전개되었다. 이에 통신우정규제청은 원활한 시행을 위해 France Telecom의 망 개방과 1개 건축물 내 복수의 사업자가 광통신망 회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경쟁 정책을 펼치게 된다.

2010년 프랑스 텔레콤은 정부의 초고속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5개년 계획에 기반을 둔 투자전략으로 'Conquests 2015'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그림 13)과 같고, 중동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흥시장 네트워크 사업권 획득 및 현지 사업자 지분 인수 등의 공격적인 시장 진입 공략계획까지를 함께 포함한다.

3. 정보통신 기술 기술 정책

'ADELE Plan'은 2004년 2월 9일 프랑스 전자정부 구축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총 270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먼저 2004년에는 e-government 가이드라인인 SADe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았고, 2005년에는 SADe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공공기관별 개인화된 공적 서비스 시스템인 'Mon-Service Public'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에는 각 부서별 e-government 구축을 목표로 한다. 'ADELE Plan' 구축에 있어 프랑스 정부는 모든 절차와 권한을 갖고 있는



(그림 14) 'ADELE Master Scheme for e-Government 2006-2010'의 세 가지 원칙

행정부서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절차 등을 손쉽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프랑스 정부 웹사이트의 게이트웨이라고 할 수 있는 'service-public.fr'를 통하여 구축하였다.

'ADELE Master Scheme for e-Government 2006-2010(Schema Directeur pour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2006-2010)'은 'ADELE Plan'의 후속조치로 2009년 9월에 입안된 정책으로 2010년까지 프랑스 전자정부 개발을 촉진할 '47 ADELE Master Scheme Initiative'를 추진하게 되는데, (그림 14)와 같은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신고객 이니셔티브는 'ADELE Plan'의 연장선에서 일반 시민이나 기업 등의 공공업무 서비스를 ICT화시키는 작업을 의미하고, 기능별 이니셔티브는 각 행정 부처들의 ICT화 작업 그리고 부처 간 커뮤니케이션 이니셔티브는 부처 간 정보 시스템의 완성을 통하여 행정조율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작업이다.

Ⅳ. 결론

본고에서는 유럽 주요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스마트 융합 기술정책 관련 기관과 이들의 주요 융합 기술정책을 살펴 보았다. 이들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계 기업인 애플과 구글의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마트 융합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

어 융합의 산물을 통하여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스마트 융합 산업을 통한 국부의 창출, 그리고 자국 국민들의 후생증진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방송과 통신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있는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방송 부문과 통신 부문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와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융합기술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류를 위시한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 부문의 콘텐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고, 가급적 ICT 분야를 각 산업계나 에너지 효율성 부문에 연계시키는 융합기술 정책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해설

ICT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통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의 합성어로 컴퓨터, 미디어, 영상 기기 등과 같은 정보 기기를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생산 · 가공 · 보존 · 전달 ·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말함.

약어 정리

ADELE	Administration ELEtronique
ARCEP	The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BKM	Die 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ur Kultur und Medien
BMBF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Wi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CSA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EU	European Union
FTTx	Fiber to the x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KT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technologie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MCC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MDStV	Mediendienstestaatsvertrag
MINEFI	Ministre de l'économie, de l'indu strie et de l'emploi
RStV	Rundfunkstaatsvertrg
SADe	e-Services and e-Democracy Programme
TDG	Teledienstegesets
TMG	Telemediengesetz

참고문헌

[1] 한국인터넷진흥원, "독일 방송통신 현황," 국가별방송통신 2011, KISA, 2012. 5.

[2] BMWi. http://www.bmwi.de/English/Navigation/Ministry/structure-and-tasks.html

[3] die medienanstalten. http://www.die-medienanstalten.de/profile/organisation.html

[4] Bundesnetzagentur. http://www.bundesnetzagentur.de

[5]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지식경제부, 2009.

[6] The Federal Government's Broadband Strategy, BMWi, 2009.

[7] 김진하, "독일의 IT 정책 동향," 주간기술동향, vol. 1313, 2007. 9. 2.

[8] 프랑스 경제재무산업부. http://www.economie.gouv.fr

[9] ARCEP. http://www.arcep.fr/index.php?id=10531&L=1

[10] CSA. http://www.csa.fr

[11] MCC.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

[12] 한국인터넷진흥원, "프랑스 지상파 디지털 전환 완료, 향후 과제는 커넥티드 TV," 글로벌 방송통신 동향리포트, KISA, vol. 62, 2011, pp. 15-19.